

농산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



조 원 량

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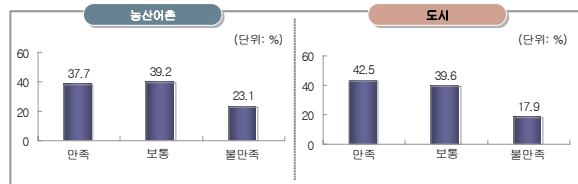
1. 정책여건

-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인적자원육성 시급
 - 그 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택정비, 도로포장 등 SOC중심으로 추진
 - 최근 쾌적한 정주공간조성,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상향식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
- 농산어촌 소득기반시설, 생활환경시설, 문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투자 중심의 농산어촌지역개발은 한계
 - 농산어촌 주민, 도시민 등의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적극 유치 필요
 - 정부주도 사업은 다양한 주체의 욕구를 반영하여 차별화시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
-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고,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 개발 필요성 증대
 -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
 -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소도읍, 면소

재지 및 중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·의료·행정 등 기반시설 지원이 요구됨

- '90년대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
 - 시·군도 이상 도로 포장률은 농산어촌이 51.1%로 도시(83.0%)보다 크게 낮은 수준
 -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도 579천동(20.4%)으로 농산어촌 주택의 신·개축 의사가 도시보다 훨씬 높음
 - 농산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2.9%(읍 80.8%, 면 33.0%)이며 특히 면지역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자가 지하수에 의존
 - 광역시·일반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% 이상이며 전국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0% 수준 임
 -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생활쓰레기, 폐영농자재, 외부유입 쓰레기 등을 주로 자체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함으로 인해 농산어촌 환경오염 심화

기초 생활 여건의 만족도



*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('04. 11)

2. 주요 추진과제

가. 농촌지역개발 인적자원 육성

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 양성, 전문가집단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

- 1) 농산어촌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개발리더 양성
 -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역량 배양
 -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, 지역발전프로그램 기획, 지역경영 등 교육
 - 마을주민, 공무원, 유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 제고 교육 실시
 -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는 정책지원에 필요한 협치(governance), 지역개발관련제도의 전문성 향상 분야 중점 교육
 - 지역개발분야 교육을 수료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추진
 - 교육수료자에 대한 교육학점관리제를 실시하고 교육수료 내용 등을 기초로 단계별 인적자원역량을 구분·관리
 - 여성의 지역개발역량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교육수료자 비율 확대
 - * 여성교육수료자 비율: ('04) 8% → ('09) 30%
 - 대학, 교육컨설팅업체, 정부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를 구성
 - 교육 전문기관간 교육내용 조정 및 장기 인적자원개발 방안 협의
- 2) 지역개발리더, 마을주민을 지원할 외부인력 저변 확대
 - 지역개발분야별 전문가 풀 구축 및 농산어촌과 네트워크 구축
 - 농산어촌지역개발인재뱅크를 마련하여 지역개발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DB화하고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 강화
 - 지역별·분야별 전문가 등을 쉽게 찾아서 지역개발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검색 및 연계시스템 마련
 -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관

심 및 참여제고

- '내고향 잠재자원개발 contest' 개최, '고향 가꾸기 웹 사이트' 운영 등
 - 농산어촌 지역개발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 은퇴자,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,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사무장 제도 도입
- 3) 지역개발역량을 갖춘 마을 등에 지역개발사업 중점지원
 - 사업별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적자원을 사업대상 선정시 의무 요건화
 -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인적자원이 포함되도록 사업지침 등 수정
 -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인적자원기준을 차별화하여 운영
 - 4)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 창출 및 활성화
 - 지역리더, 관련전문가, 출향인 등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의 인적자원을 총괄 대표하는 新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
 - 新직업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新직업군 전국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, 홈페이지 구축, 동호회 형성 등 지원
 - 농촌마을CEO(농촌지역개발현장전문가)제도 도입

나.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

◇ 생활권별(배후마을 - 면소재지 - 소도읍) 기능과 역할에 맞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
◇ 주거, 상·하수도, 교통,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편익 제고 추진

- 1) 농산어촌의 계획적 개발시스템 구축
 - 관계부처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·운영
 - 시·군 단위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하여 시·군 단위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·운영
 - 시장·군수, 지역혁신리더, 마을리더 등이 참여
 - 농산어촌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,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산어촌 공간정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
 - 중앙단위, 시·군단위 농산어촌 지역개발협의회와

공동 추진

2) 농산어촌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 추진

- 농산어촌 마을권역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
 - 지역 자원개발, 소득화사업, 경관 형성, 커뮤니티 형성 등 권역 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
 - 동일한 생활권·영농권·어메니티자원 권역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,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
 -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
 - 산촌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
 - 생산·관광·문화가 공존하는 어촌건설을 목적으로 중심항·포구를 축으로 하는 「중심어촌계」를 선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
 - 주요 읍·면을 농산어촌의 중심지로 육성
 - 주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과 생활편익 및 소득문화기반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
 -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농산어촌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
 - 면체육공원, 건강관리실, 종합복지회관, 소재지 정비 등
 - 낙후지역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
 -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현저하게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시·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효과 극대화를 도모
 -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에 대해서는 낙후정도에 따라 년 20~3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음
- 3)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
- 농산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·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금리 인하 등 추진
 - 주택 신축비용의 1/2 수준까지 융자지원 확대(지원

한도 30백만원)

- 지원금리도 연리 3.9~5.5%에서 3%로 점진적으로 인하
 - 연간 5천동씩 빈집정비사업 추진: ('04) 52천동 → ('09) 77천동
 - 농가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(환경친화형, 고풍자 편의형 등)을 개발, 주택 신·개축시 적용
 - 농가환경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거쳐 주거모델 시범사업 추진
 - 생태적 측면: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연계
 - 물리적 측면: 에너지 및 자원 절약, 건전한 토지이용
 - 사회문화적 측면: 전통주거공간 유지보전, 생활공간 편리성 도모
 - *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: ('05) 5개 마을 → ('09) 45개 마을
- 4) 상·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
- 면단위 미급수 지역(500개면)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확대
 - *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확대: ('03) 33% → ('09) 65%
 -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소규모 자연마을(50호 이하)에 암반관정을 개발,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
 - * '05~'09년까지 1,500개소를 개발하여 22만여명(면지역 가구당 인구 2.9명)에 대한 식수문제 해결: ('04까지) 4,751개소 → ('09) 6,251개소
 - 농산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: ('04) 102개소 → ('09) 394개소
 -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
 - 친환경 하천정비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변공간 정비
 - 매립시설·재활용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군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
 - 광역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83개군을 대상으로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
 - * 폐기물처리시설 수: ('04) 109개소 → ('09) 140개소

-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및 마을 하수도 정비를 통해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
 - 마을하수도 연간 200개소 수준 정비('04년까지: 6,459개소 완료)
- 5) 농산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
 -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
 - 농어촌도로 정비: ('04) 18,120 km(포장률: 29.4%) → ('09) 19,270 km(31.2%)
 - 전국 읍·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구입 자금 및 대폐차비 확대 지원 추진('04: 1,800만원/대)
 - 전국 1,570여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손실 비용을 지원하고,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 추진
 - * 차도선형 여객선: ('04) 2대 → ('09) 11대
- 6) 면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
 -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·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
 - 마을내 도로,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
 - 마을회관, 빈집정비, 소공원, 녹색담 조성 등 경관 정비
 - * 사업대상: 770개면(광역시 준농산어촌 15개 자치구 포함)
 -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
- 7) 과학·문화·예술·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
 -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센터,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41관을 건립
 - '05년에 공공도서관 17개소를 건립하고, '06년부터 '09년까지 매년 6개소씩 공공도서관 건립
 - 농산어촌 지역의 폐가·폐교를 다양한 과학·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
 - 개소당 1~2억원 범위내에서 리노베이션 90%, 프로그램운영비 10% 지원
-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과학체험을 위해 사이언스 샵, 폐교를 활용한 테마과학관 등 설치
- 중심지역에 체육·문화·청소년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간이 체육시설, 편익시설을 구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
 - * 농어촌 체육문화센터 건립: ('04) 2개소 → ('09) 12개소
 - *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: ('04) 154개소 → ('09) 1,154개소
- 산림자원의 영구보전·전시·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 건립(9개소)
 - 산림박물관: ('04) 2개소 → ('09) 11개소
-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
 - 지방문화원별(221개)로 서민층, 생활보호대상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
 - * 문화원별 연간 2~5회, 각 회별 70~300명 초청 규모로 운영
- 8) 농산어촌의 정보화기반 확대
 -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
 - '05년까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(ADSL) 구축
 - '05년까지 농산어촌 가구(347만가구)의 97%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, '07년까지 도서·산간지역 가구에 대해 위성 인터넷서비스 보급
 -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디지털사랑방 조성 등을 통해서 도·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
- 다. 농산어촌을 삶과 휴양·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

- ◇ 농촌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정비, 도시민 유입기반 마련
 - ◇ 농촌경관과 조화된 지역개발로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주여건 마련

 - 1)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촉진하는 새로운 농촌수용여건 마련
 - 도시민의 유치홍보를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콘테스트

- 트 실시('06. 10)
- 지자체가 도시민 입주수요,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, 입주민의 지역 사회봉사활동 지원방안 등을 준비, 홍보 및 입주신청 접수
 - 농촌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 지구 조성 본격 추진
 - '07년중 도시민 입주를 목표로 '06 상반기 공사 착수
 - 종합적인 의료·복지·문화 서비스 연계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
 - *연계계획: ('06) 9개 사업(31억원) → ('07) 15 (108) → ('08) 3 (47)
- 2) 농촌 경관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
- 경관작물(유채, 메밀 등) 재배 지원 시범사업('05~'07) 결과를 토대로, 향후 지원대상을 주택·담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
 - '07년까지 농촌경관지표 제정을 목표로 '06년중 연구용역, 현지실사, OECD 선진국 사례분석 등 기초 작업 추진
- 3) 농촌 정주의향 도시민들이 불편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도시민 유입대책 추진
- 포털 사이트 콘텐츠를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, 귀농·귀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('06. 3)
 -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병행, 농어촌 종합정보센터에서 현장 안내, 전화·방문 상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('06. 2)
 - 농촌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 확대
 - * 교육인원: ('05) 27과정 1,557명 → ('06) 31과정 2,000명